

# 美, BDA 계좌 5~7개 선별해제 검토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초기 행동에 돌입하는 것을 전제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된 2천400만달러 규모의 북한계좌 50여개 중 합법자금으로 추정되는 5~7개 계좌에 대한 선별해제 타당성 여부를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워싱턴의 고위소식통은 "미국은 최근 한국측으로부터 합법자금이 확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BDA의 북한계좌 5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미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그간의 자체 조사내용과 대조해 가며 정밀 분석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합법계좌와 5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국무부 부장관에 내정돼 앞으로 북한 문제를 담당할 존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에게 전달했으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경과 "北 핵폐기 초기행동 전제돼야" 반발 北-美 'BDA 실무회의' 내주 연기 가능성도

그는 이어 "미국 정부 관리들이 5개 계좌의 내용을 전해 듣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게 직접 알려줘도 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국측은 이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측은 미 고위관리들에게 "미국이 북핵 6자회담과 BDA 문제를 분리 대응하려 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BDA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에 거론된 5개 계좌는 그러나 그간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영국의 금융업자 매 카스킬이 투자한 북한 대동신용은행(600만

달러), 세계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800만달러) 계좌와는 별도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미국이 이 5~7개 계좌의 일부를 해제하는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을 경우 내달로 예상되는 북·미 6자회담이 급류를 타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 금융당국이 BDA에 묶은 2천400만 달러의 자금 중 합법적 자금은 총 800만~12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북 금융제재 실무부서인 미 재무부와 일부 강경파들은 "금융제재는 6자회담과 무관하며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

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북한간 '방코델타아시아(BDA) 실무회의'가 주 후반부에 개최되거나 1주 정도 순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BDA 회의 개최가 연기될 경우 2월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과 사실상 동시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22일 "북미간 베를린 회담(16~18일)에서 BDA 회의를 별도의 트랙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조만간 회담 재개 장소와 일자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양측이 실무적으로 검토사항이 있어서 당초 예정보다 회담 개최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힐 차관보는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차기 6자회담과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열릴 수도 있다"면서 "개최지는 아직 미정이며 베를린도 후보지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크리스토퍼 힐 미국부 동아태 차관보가 22일 베이징을 떠나기 앞서 호텔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FP=연합뉴스

## 한국인 피폭수당, 日 항소심서 역전 패소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피폭수당과 관련한 일본 법원의 항소심 소송에서 22일 역전패했다.

일본 후쿠오카고등법원은 이날 일본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폭자원호법에 의한 건강관리수당을 받지못했던 최모(2004년 작고)씨에게도 수당과 위자료 80만엔을 지급하라는 나가사키지법의 1심 판결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항소심 소송의 정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해의 피폭자의 수당지급권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가였다.

1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해외공관에서 피폭자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 제도를 바꾼 점을 고려, 이러한 제도변경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본 밖으로 거주지를 옮긴 피폭자에게는 수당의 지급권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당초 '통달'(1974년)이 폐지된 해외공관에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더라도 이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해석, 1심의 결정을 취소했다. /도쿄=연합뉴스

## 미군 철수 건의, 거절당해 말리키 이라크 총리, 작년 11월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작년 11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철수를 건의하고 이라크 정부가 수도 치안을 담당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몇몇 관리들과 인터뷰를 인용, 말리키 총리가 지난 11월30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부시에게 이같은 제안을 했으나 부시 대통령이 얼마 안돼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바그다드와 알-안바르주에서의 종파간 폭력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라크에 파병하는 병력을 2만1천500명이나 증강하는 조치를 이번 달에 발표했다는 것. /워싱턴AF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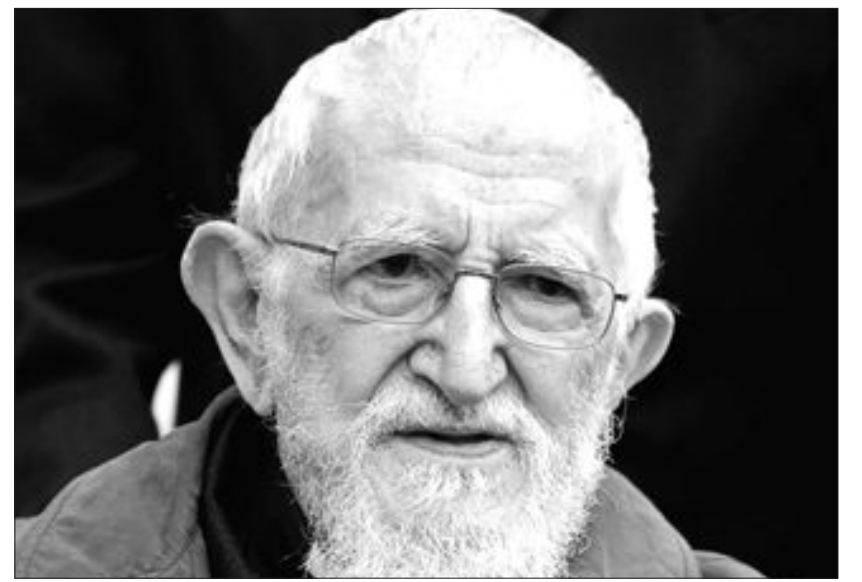
## 인도에 규모 7.3 강진 쓰나미 경보 발령...3명 부상

인도네시아 북동부 근해에서 21일 저녁 7시 27분(현지시간)에 리히터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 쓰나미 경보가 발령했으나 자체 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AP는 목격자들의 발언을 인용, 이번 지진으로 북부 솔라웨시의 주도인 마나도에서는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금이 갔으며 시내 한 교회가 무너져 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자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Ring of Fire)'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 화산폭발 등 자연 재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빈자의 아버지' 佛 피에르 신부 선종



'빈자의 아버지'로 불리며 프랑스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피에르(사진 위) 신부가 22일 새벽 5시25분(현지시각) 파리 '발드 그라스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4세.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이 폐 감염증이라고 밝혔다.

피에르 신부는 지난 1912년 8월5일 프랑스 리옹에서 앙리 그루에즈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1949년 노숙자 자립 공동체인 '엠마우스'를 만드는 등 50년 넘게 빈민 구호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빈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특히 그는

### 엠마우스 창립 노숙자에 헌신

### 사제 신분 레지스탕스 활동도

사제의 신분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저항해 레지스탕스 활동을 벌였는가 하면 국회의원 활동을 하기도 했다. 피에르 신부의 선종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다. 유력 일간지 '르몽드' 인터넷판은 초기 화면에 피에르 신부의 선종 소식을 올리고, "엠마우스의 창립자, 피에르 신부가 죽었다"고 보도했다.

'르 피가로'와 '리베라시옹' 등 다른 언론들도 일제히 그의 죽음을 보도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1957년 7월 엘리제궁에서 인도 수상인 네루(왼쪽)와 함께 한 피에르 신부.

전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프랑스는 거대한 상징이자 양심, 그리고 선행의 화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우파의 유력 대선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는 "프랑스의 가슴에 조기가 개입했다"며 "그의 투쟁은 그 무엇보다 위엄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그의 사제 서품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엮은 '피에르 신부의 유언'(웅진지식하우스 펴냄)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출간됐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간호사 로봇' 나온다

### 유럽 대학들 연구 진행중

이르면 오는 2010년까지 영국 병원에 '간호사 로봇'이 등장할 전망이다. '아이워드'라는 이름의 의료용 로봇 개발 계획을 총괄하는 토머스 슬래켈은 현재 워워, 카디프, 뉴캐슬, 더블린 등 여

러 대학들이 유럽연합(EU)의 자금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슬래켈은 오는 2010년에 3가지 로봇 시제품을 내놓는다는 잠정 목표를 정하고 있다며 이 계획이 의료 종사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 병원들 사이의 정보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런던=연합뉴스